

‘새의 좌우 날개’ 논리의

허구

남정욱 편

 자유경제원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차례

서문 | 생물학과 사회학을 뒤섞은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엉터리 거짓말

- 남정욱 · 2

1. 리영희의 양날개론, 중앙일보의 열린 보수론	조우석 · 4
2. 양날개론의 인신론적 오류	황수연 · 6
3. 문제는 전체주의 좌익이다	배진영 · 9
4. '망조(亡兆) 든 대한민국'에 대한 냉철한 진단	조우석 · 12

생물학과 사회학을 뒤섞은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엉터리 거짓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건 새한테나 해당되는 말이다. 그걸 복잡하기 그지없는 인간 사회로까지 확대해서 주장하는 건 종種의 차이를 완벽하게 무시한 그야말로 새머리다운 발상이다. 말을 바꿔 '국가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고 해 보자.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것이다. 당연하다. 이제껏 그런 사회나 국가는 없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한 축으로 하고 사회주의적 시스템을 다른 한 축으로 하는 그런 해괴한 국가는 인류 역사에 출현한 적이 없다. 이런 가상의 국가를 새鳥로 바꿔 그려보자. 독수리 몸통에 날개에다 다른 한쪽은 기러기 날개가 달린 아주 기형적인 모습의 새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새는 날기는 커녕 이륙 자체가 불가능하다. 균형을 잡지 못해 뒤뚱거리다가 쓰러져 날짐승의 먹이가 된다.

이렇게 새의 양날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다원성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한다. 그럴 듯하지만 역시 사기다. 빙빙 돌려 말하고 있지만 결론은 좌익들의 존재를 용인하라고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사회주의 국가가 건강하고 다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포용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런 사회주의 국가가 있다면 나도 가서 살아보고 싶다. 그런 이질적인 형태의 정치 시스템은 공존할 수 없다. 한쪽이 다른 한 쪽에 대해 적대적인 이념은 절대 공존이 불가능하다. 한쪽 이념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그 이념의 존립근거이기 때문이다. 미국 공화당 좌파의 정책을 보면 우리나라 민주당보다 훨씬 과격하다. 그러나 그들의 정책은 항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테두리 안에 있다. 이를 벗어나면 국민들은 이런 딱지를 붙여준다. 래디컬. 개혁이 아니라 급진·과격이라는 뜻이다.

양 날개를 떠드는 사람들은 이들 뿐이 아니다. 이른바 보수니 우파니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주장을 응용하여 떠드는 인간들이 있다. 중도, 통합, 제 3의 길 같은 것들이 다 그 통속이다. 철학과 사고가 견고하지 못하거나 혹은 표가 욕심 날 때 이런 소리들을 해 댈다. 어느 쪽이든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중도'는 상대방의 아이템이 탐 날 때 쓰는 치사한 표현이다. '통합'이란 정치 철학상 같이 있기 힘든 사람들이 다른 욕심으로 모였을 때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쓰는 표현이다. '제 3의 길'이란 자기 철학으로는 대안을 내놓지 못할 때 가져다 붙이는 해괴한 노선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모두 똑같은 레토릭을 사용한다. 조화와 타협. 이때부터는 웃기는 게 아니라 가증스럽다. 국민들을 바보로 알 때 이런 말이 튀어 나온다. 이 책은 이런 황당하고 뻔뻔하고 어이없는 인간들의 발언을 조목조목 격파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다. 평론가 조우석은 대한민국 체제에 복한의 '평등과 나눔 그리고 인간적 협동의 철학'을 더하자고 주장한 리영희의 주장을 격파한다. 황수연 교수는 특하면 시장의 실패를 주장하며 해결을 위해 정부를 끼어 넣자는 논리의 허구를 면박 준다. 배진영 기자는 양날개론이 결국 김일성주의자들에게도 정치적 시민권을 주자는 소리라

며 흑심을 폭로한다. 결국 새머리鳥頭에서 나오는 주장이라는 이야기다. 참고로 앵무새의 지능은 사람의 세살, 까마귀의 지능은 일곱 살 정도다. 양 날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지능도 그와 별로 다르지 않다.

2016. 12 리버티홀에서 남정욱

리영희의 양날개론, 중앙일보의 열린보수론

조 우 석
문화평론가

종북의 원조 리영희가 만든 가당치않은 말장난인 '새는 좌우로 난다'가 얼마나 영터리인가는 여러 각도에서 확인된다. 수상쩍기 짝이 없는 '중도', '통합'등의 용어도 이른바 양날개론에서 파생됐다는 걸 우리가 익히 알지만, 그건 실로 위험천만한 환상을 심어주는 원흉이기도 하다. 주적(主敵)인 전체주의 북한을 감싸는 논리 비약을 낳기 때문이다.

일테면 리영희의 경우 양날개론이 남과 북이 반반씩 합치자는, 황당한 체제수렴의 통일론과 함께 북핵 옹호로 치달았다. 양날개론이 끝내 좌우합작론으로 둔갑되며, 친북-종북으로 연결되는 게 리영희의 수준이었다. 특히 소련-동구가 몰락한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무렵 기댈 곳 없어진 리영희는 모택동주의자에서 친북 노선으로 냉큼 돌아섰다.

그래서 그는 종북의 원조인데, 놀랍게도 요즘 그런 리영희 식의 멍청이 짓을 중앙일보가 반복하고 있다. 단언컨대 그건 그 신문, 그 매체의 지적(知的)-정치적 파산에 다름 아니라고 나는 믿고 있다. 위장 지식인 리영희가 뿌린 씨앗이 한 메이저 신문을 망가뜨리고 있는 참담한 꼴을 요즘 우리는 지켜보고 있으니 참담하기 짝이 없다. 리영희가 체제수렴과 북핵 옹호를 들먹였다면, 중앙일보는 약간 다르다.

요즘 그 신문은 미국·북한 평화협정 체결을 열렬히 주창하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이 주기적으로 내세워온 위장평화의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걸 세상이 다 아는데, 멀쩡한 국내 신문이 거기에 목맨다? 나는 안다. 그건 예견된 참사다. 리영희가 개진했던 양날개론과, 중앙일보의 모토인 '열린 보수'란 본디 오십보백보이기 때문이다. 즉 그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부족에서 나오는 전체주의 부역질을 감싸는 싸구려 레토릭에 불과하다.

중앙일보가 망가진 모습을 보려면 지난 한두 달 오피니언 페이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최악의 지면이 2월5일자 김영희 칼럼 '핵 동결과 평화협정의 교환이 답이다'이었다. 그 신문의 논조를 대표하는 국제문제 대기자의 직함을 가진 그는 미국·북한이 수교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걸로 핵 위기를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적지 않은 우파 인사들이 “중앙일보가 드디어 갈 데까지 간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

이게 우연일 리 없다. 3월1일자 오피니언 페이지에서 논설위원 배명복도 “지나치게 강경일변도로 가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와 함께 김정은 정권의 체제붕괴를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의 용기를 외려 잘못이라고 지적(‘히든밸리에서 바라본 한반도’)했다.

뿐인가? 중앙일보는 외부 필자를 동원해서까지 그런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일테면 기회주의적 지식인 문정인(연세대 교수)이 밝힌 “점진적이고 실용중의적인 비핵화” 주장(1월16일자), 전 총리 정운찬의 개성공단 폐쇄는 잘못이라는 헛소리(2월29일자)가 모두 그 맥락이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누구하나 지적하지 않는다. 하는 수 없이 그 신문에서 근무했던 내가 나서서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

단언하지만, 그건 그 신문 오너인 회장 홍석현의 위태로운 멘탈리티를 반영한다. 홍석현은 유연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자랑하지만, 상태는 썩 좋지 않다. 그래서 지난해로 창간 50년을 맞았던 중앙일보가 휘청대고 있고(논조와 신문시장 모두에서), ‘종편의 한겨레’ 소리를 듣는 jtbc 역시 좌파 상업주의 처신에 코박고 있다. 홍석현과 주변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헌법가치에 대한 확신이 태부족한 것이다.

이 모든 한계가 ‘열린 보수’란 중앙일보의 레토릭에서 예견됐으며, 그건 리영희 류의 양날개론과 닮은꼴이라는 걸 이 자리에서 새삼 재확인한다. 리영희야 한 개인에 불과하지만, 100만 부 이상을 찍고, 종편을 거느린 채 미디어그룹을 말하는 중앙일보의 지적-정치적 파산이란 실로 두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좌파라고 딱히 규정할 순 없지만, 더 위험하게도 좌파정서를 가지고 있는 무수한 무리들(한국사회의 절반 이상이며, 젊은 층에 특히 많다)들에게 삼류 매체로 전락한 중앙일보가 미칠 악영향은 실로 막대할 것이 우려된다. 그럼 이 매체가 끝내 어디까지 갈까? 그걸 내다보려면, 양날개론의 원조인 리영희의 말년을 잘 살펴보면 된다.

양날개론은 리영희의 경우 좌우합작론으로 연결됐다고 앞에서 밝혔지만, 실로 싸구려 논리에 불과하다. 그는 생전 이렇게 밝혔는데, 이 기계적 중립의 태도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북한과 남한이 제도권 삶의 방식이건 가치관이건 합쳐서 반반씩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또 그의 눈에 대한민국은 타락한 체제다. 반면 북한은 “평등과 나눔 그리고 인간적 협동의 철학”을 가졌으니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소리도 반복했다.

끔찍하지 않은가? ‘북한=선한 사회’, ‘대한민국=타락한 체제’라는 얼척없는 이분법이 지적-정치적 파산자 리영희의 머릿속이다. 그런 그는 대한민국의 사상적 무장해체를 줄창 내세운 반역적 지식인이다. 걱정은 중앙일보가 가는 최악의 선택이 그쪽일 수 있다는 점이다. 터놓고 말하자. 중앙일보 따위가 문제라? 이 땅의 청춘과 지식인들이 중앙일보의 삼류 선동에 물들까봐 그게 못내 걱정일 뿐이다.

양날개론의 인식론적 오류

황 수 연

前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

지금 중도나 통합이 정치권에서 매우 인기 있는 용어다. 그 주장인즉 시장에만 의존하면 문제가 많으니 시장 대신 많은 부분 정부가 맡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 시장도 아니고 순수 정부도 아닌 제3의 길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달리 양날개론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양날개론에서 암시받듯이 시장과 정부가 반씩 맡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GDP의 반에 가깝게 쓰고 있으니 이미 양날개론의 주장은 현실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정치가들과 정당들은 이것이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선전 활동을 전개한다. 사실 많은 유권자들에게 이러한 중도, 제3의 길, 양날개론은 우리의 올바른 국정 방향으로 여겨진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자본주의도 문제가 있고 사회주의도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장점과 사회주의의 장점을 딴 혼합 경제가 바람직하다, 시장이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결함도 있으므로 시장의 자율을 허용하면서 시장의 균살을 제거하는 일을 정부가 해야 한다, 따라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중도, 완전한 자본주의도 아니고 완전한 사회주의도 아닌 제3의 길 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 즉 기본적으로 민간이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로 말미암은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 정부가 간섭해야 한다, 사업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여 규제되고 통제되는 자본주의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양날개론은 틀렸을 뿐만 아니라 해로운 사고방식이다. 첫째, 양날개론은 자본주의 혹은 시장 경제의 장점을 인정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고쳐 사용하고 고치는 주체는 정부와 정치라는 것인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틀렸다. 마치 시장에 결함들이 엄청나게 존재하는 것 같이 주장하지만 시장의 결함들은 극히 미미하다. 또한 그러한 시장 결함들은 시장 자신이 잘 치유하고 그것들을 정부나 정치가 치유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둘째, 양날개론으로 비유되는 정부 개입주의는 사회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에 해롭다. 정부가 경제에 더 많이 개입하면 할수록 그 나라는 더 못산다. 경제적 자유와 국민 소득 수준(혹은 경제 성장률)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가 이를 웅변으로 말해 준다.

정부 개입주의는 시장의 실패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면 잘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생각이다. 정부를 전지하고 전능하며 자비로운 독재자로 보는 시각이다. 시장의 실패에는 독점, 외부성, 공공재의 문제들이 거론된다. 또한 시장은 정보의 문제를 지니고 있고 소득 분배에 문제가 있다고도 한다. 정부 개입주의자들은 이러한 명분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우선, 그들은 시장에 독점이 발생할 때 정부가 개입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연 독점이나 담합에

의한 독점은 대체품이 나타나거나 담합이 깨져서 사라지게 되어 있다.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독점은 정부에 의한 독점, 법률에 의한 독점이다.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문제다.

둘째, 그들은 외부성의 문제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한다. 정부가 세금과 보조금의 적절한 비율을 정해 외부 비용과 외부 편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만이 활동의 비용과 편익을 알 수 있으며 정부는 그것들을 계산할 수도 없고 그것을 알 현장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 외부성이 존재할 때 계약을 통해 외부성이 시장에서 해결되기도 한다.

셋째, 그들은 법 집행, 국방, 공해 문제 해결과 같은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면 무임승차 문제가 일어나서 공공재가 시장에서 제공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재 제공은 설사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강제 승차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정부가 '공공재'로서 제공하는 것의 대부분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시장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넷째, 그들은 정보 문제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간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 문제는 정부 및 정치적 영역에서 더 심각하다.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는 충분한 정보를 얻지만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때는 정보가 빈약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시장과 달리 의사 결정에 중요한 현장 지식과 암묵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시장에 내맡겨 놓으면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게 되니 가난한 사람들로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가 하는 소득 재분배는 가난한 사람들 쪽으로 가지 않고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중산층으로 가게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정부에 의한 소득 재분배 정책은 수혜자에 도움이 되기보다 공급자(관료)에 이익이 되게 되어 있다. 또한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소득 재분배는 그것을 얻기 위한 지대 추구를 조장하여 나라를 더욱 가난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의사 결정 방식에는 고유한 결함들이 있다. 정부 방식에는 투표자들의 합리적 기권과 합리적 무지, 이익 집단이 정보와 정치 참가에서 행사하는 비대칭적인 영향력, 정치가들이 장기적이고 사회 전체적인 이익보다 단기적이고 특수한 이익에 영합하는 점, 과반수 제도가 지닌 문제점 등 숱한 결함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소위 정부 실패라는 이름으로 공공선택학자들에 의해 엄밀하게 분석 제시되었다. 그리하여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전통적인 후생 경제학자들의 시장 실패론은 공공선택학자들의 정부 실패론으로 논파되었다.

양날개론의 인식론적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공선택론(public choice)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해가 없으면 심지어 원인에 대한 진단은 같이 하면서도 처방을 잘못 내리게 된다. 좌파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우파 데이비드 스톡먼 둘 다 대중보다 엘리트에 체계적으로 유리한 잘못된 미국 정부 정책이 시장 체제와 민주주의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상당한 의견 일치를 본다. 그들은 정부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본다. 이것은 정부의 범위와 권력을 제한할 강력한 논거가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티글리츠는 스톡먼과 달리 정부의 범위와 권력을 증대하여 이 문

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인식론적 구조가 모순적인 것은 그가 전지하고 자비로운 독재자 모형에 입각하고 있고 공공선택론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양날개론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정부와 정치의 본질과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정말 많고 심한 정부 실패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고 선불리 시장 대신 정부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도 실패하고 정부도 실패한다. 그러나 정부 실패가 시장 실패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더 유해하다. 따라서 첫인상만 가지고 시장이 실패하니 정부에 의존해야 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자기 교정을 해 나가는 진정한 잠재력이 있다. 시장에서는 오늘의 문제가 내일의 이윤 기회를 나타낸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에서는 오늘의 비효율이 내일의 더욱 큰 비효율이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시킨다. 시장이 문제의 해결사다. 정부 개입주의자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통찰력을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그들은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쪽으로, 양 날개로 날아야 한다는 식으로, 왜곡된 주장을 하게 된다.

정부 개입주의는 국민들이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달콤한 유혹을 한다. 그러나 경제적 개입주의는 자멸적이다. 그것이 적용하는 개별 정책들은 추구되는 결과를 달성하지 못한다. 자기들이 바꾸려고 의도했던 이전의 상태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를 야기한다. 사업에 대한 정부 간섭의 불가피한 결과는 실업, 독점, 경제적 위기, 생산성 제한, 경제적 민족주의, 전쟁 등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의 결과다.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시장의 실패는 거의 없고, 정부와 정치의 실패는 만연하다고. 따라서 양날개 비유는 틀렸다고.

문제는 전체주의 좌익이다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이념(理念)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념이 뭐가 중요하냐? 이념의 시대는 갔다.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통일....

국어사전에 의하면 ‘이념’은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라고 되어 있다. 사람마다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다르게 생각하는 건 보장되어야 한다. 그걸 보장하는 게 다원주의(多元主義)다. 서로 다르게 생각할 권리(특히 정치적 생존방식)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조건 아래서라면, 서로 다른 생각 간에 공존도 가능하다. 여기서는 좌우의 날개로 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기독교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의 공존이 가능하다. 두 정당은 기업이나 사회복지,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점이 무척 다르다. 하지만 기본법(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든지 법치주의, 정치적 다원성의 인정, 사유재산권의 보장 등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합의가 되어 있다.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세금을 좀더 많이 매긴다든지, 복지를 확충한다든지, 원전(原電)의 문을 닫는다든지 하는 변화는 있지만, 이러한 원칙 자체를 훼손하지는 않는다.

영국에서 노동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굴락(강제노동수용소)이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보수당이 집권했다고 절멸캠프(나치 유대인학살수용소)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요즘 유럽에서 ‘극우세력’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의 국민전선, 오스트리아의 자유당 같은 부류들이다. 이들 정당 소속 정치인들 가운데 나치즘이나 파시즘에 대해 망언을 하는 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이 집권할 경우 이민정책, 난민정책이 경화(硬化)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권력을 잡아도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권력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패배하면 그들은 권력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좌우의 날개 모두, 혹은 한쪽이 상대와의 공존을 거부하는 경우이다. 특히 정치적 질서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를 경우, 좌우의 날개로 날기는 고사하고 비행, 이륙자체가 불가능하다. 아니 그 정치공동체는 해체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역사적인 예를 몇 개 들어보자.

중국은 1924~27년, 1936~1945년 두 차례에 걸쳐 국공합작(國共合作)을 했다. 손문 시절 제1차 국공합작 때에는 공산당원들이 개인자격으로 국민당에 입당했다. 국민당군의 사관학교였던 황포 군관학교 정치부 주임으로 주은래가 취임할 정도였다. 하지만 손문 사후 장개석은 우익 권위주의 정권 수립을 꿈꾸었다. 공산당 역시 세가 약해서 국공합작을 한 것이었지, 속으로는 자신들의 혁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양쪽 모두 자유민주주의, 다원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결국 장개석의 선제공격(상해쿠데타)로 양자의 합작은 끝났다. 이후 국민당과 공산당은 내전 상태에 들어갔다.

서안사변과 중일전쟁으로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졌다. 공산군 부대들이 국민당 정부의 부대로 재편됐다. 하지만 중일전쟁 중에도 국민당군과 공산당군은 서로 싸웠다. 일제가 패망하자마자 양자는 내전으로 돌입했다. 1949년 국민당 정부는 대만으로 패퇴하고, 공산당이 대륙을 차지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런던에는 전쟁 전 합법정부의 맥을 이은 폴란드 망명정부가 있었다. 미국, 영국 등 열강은 이 폴란드 망명정부를 합법정부로 인정했다. 그 휘하의 폴란드군은 영국본토 항공전, 중동, 북아프리카, 이탈리아전투 등에서 연합군과 함께 피를 흘렸다. 폴란드 국내에는 망명정부의 권위를 인정하는 폴란드국내군이라는 레지스탕스 군대도 있었다.

전쟁 말기, 스탈린은 자신에게 순종적인 폴란드 공산주의자들을 내세워 르블린에 괴뢰정부를 수립했다. 카틴 숲 학살사건, 영토획정문제 등에 대해 런던의 폴란드망명정부가 스탈린의 주장을 따르지 않자 스탈린은 르블린 정부를 폴란드의 합법정부로 승인했다. 카이로회담, 테헤란회담, 알타회담 등에서 미국, 영국과 소련은 폴란드 문제로 입씨름을 했다. 결국 폴란드 망명정부 인사들과 공산당 인사들이 참여하는 연립정부를 수립하고, 폴란드의 운명은 폴란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좌파, 우파, 중도파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연립정부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소련 점령군의 힘을 등에 업은 공산주의자들은 우파 인사들은 파시스트, 나치부역자로 몰아 숙청하거나 살해했다. 국방부, 내무부(경찰), 정보부, 선전부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자리는 공산주의자들이 차지했다. 우파나 중도파가 장관을 맡은 경우에는 실권을 행사하는 차관 자리는 공산주의자들이 차지했다. 토지개혁으로 우파의 물적 기반을 허물었다. 그리고 결국은 1947년 공산정권을 수립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 비교적 민주주의 체제를 잘 유지한 나라였다. 역사적으로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제국의 지배를 오래 받아서 서유럽에 가까웠다.

체코슬로바키아도 나치 침공 이후 런던에 망명정부를 수립했다. 망명정부의 수반은 국부 토마시 마사리크의 후계자로 제2대 대통령을 지냈던 에드바르트 베네시였다. 그는 원래 중도파 민주주의

자였지만, 뮌헨회담에서 영국, 프랑스 등 열강이 주데텐을 나치 독일에 양보하도록 강요했던 기억 때문에 친소적인 입장으로 기울었다. 전후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좌우연립정부가 수립됐다. 하지만 국부 토마스 마사리크의 아들 얀 마사리크 외무장관이 의문사 하는 등 비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살해, 탄압, 위협이 계속됐다. 그 과정은 폴란드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결국 체코슬로바키아는 1948년 공산주의자들의 쿠데타로 공산정권이 수립됐다.

중국의 국공합작, 2차대전 이후 동유럽의 좌우연립정권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인가? 공존을 거부하는 세력, 상대를 말살해야 한다고 믿는 세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인 R.럼멜 교수 등은 20세기 이후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는 전쟁이 없었다는 ‘민주주의 평화이론’을 주장한 바 있다. 어느 한쪽이 전체주의 국가, 독재주의 국가인 경우에만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국제정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국내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사회민주주의 등 좌파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수용하는 한, 그 나라 민주주의는 훼손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안에 전체주의, 독재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과의 공존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좌파, 아니 좌익세력은 유감스럽게도 공존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김일성 왕조에 충성하는 자들이다. 통진당 비례대표 조작 등에서 보듯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자들이다. RO사건에서 보듯 공공연히 내란을 획책했던 자들이다. 그게 아니면 그들의 동조자, 방조자들이다.

좌우의 날개로 날자고? 그런 소리를 했던 자는 철지난 모택동주의자였다. 좌우의 날개로 날자고 주장하는 자들은, 공산주의자들, 김일성주의자들에게도 정치적 시민권을 주자는 소리를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당을 할 자유를 허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공산당은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공산당이 아니다. 스탈린과 모택동을 뛰어넘는 극악한 전체주의자들이다. 대통령을 ‘쥐박이’이 ‘바뀐애’니 하며 살던 이 나라 국민들에게 위수김동, 친지김동을 찾지 않으면 숨 쉴 수조차 없는 체제를 강요할 자들이다.

전체주의 좌익과는 함께 날 수 없다. 좌우 양 날개로 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다원주의에 대한 인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망조(亡兆)든 대한민국'에 대한 냉철한 진단

조 우 석

문화평론가

항구적 위기를 반복하는 한국사회를 진단하려면 어느 정도의 비관적 전망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무턱 댄 희망적 사고나, 요행수를 기대하는 데서 오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텐데, 쉬쉬하지 말고 터놓고 말하자. 지금 한국사회는 '거의 망조(亡兆) 든 나라'다. 경제적 무기력, 이념적 혼란에 따른 기회비용, 황폐화된 집단정서, 여전한 전체주의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이런 음울한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는 정치력까지...

디스토피아의 그림을 그리지 않을 수 없는 음울한 지금 상황은 정확히 패망 직전의 월남을 연상시킨다. 대통령도 올해 정초 대국민담화에서 그 점을 일깨워준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라면서 "월남이 패망할 때 지식인들은 귀를 닫고 있었고, 국민들은 현실정치에 무관심이었고, 정치인들은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작심 발언이었으나, 놀란 건 그 직후였다. 엄중한 현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의 이뤄지겠거니 기대했는데, 중앙일보부터 대통령 발언에 면박을 줬다.

41년 전 정쟁을 일삼던 국회 등 정치권을 비판했던 그의 선친(先親) 박정희 대통령의 발언과 너무도 닮은꼴이라는 냉소다.(1월 15일자 중앙일보) 둘 둘 모두 독재자란 얼척 없는 비판이다. 이 틈에 한겨레가 대통령 발언을 숫제 "망언"이라고 규정했다. 현 사회주의 베트남정부에 대한 외교적 배려가 없는데다가, "베트남사람들의 민족적 자부심인 민족해방투쟁을 전면 부인"했으니 대통령의 실언이 맞다는 헛소리다.(1월15일자)

우리와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나라 베트남의 이른바 민족해방투쟁을 두둔하며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이 나라 정신 나간 언론이 요즘 하는 짓거리인데, 더 놀란 것 호남의 한 지방지의 칼럼(새전북일보 1월18일 자 칼럼 '월남이 패망했다고?')이다. 그 신문은 "베트남은 패망한 것이 아니라 통일을 이루고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발전해가고 있는 나라"라고 쌍지팡이를 짚고 나섰다.

이 정도면 중증의 질환인데, 중앙일보-한겨레-새전북일보 논조의 바탕에 깔린 게 우리민족끼리의 정서이자, 그걸 도그마화한 NL(민족해방)론이다. 공산화 물결쯤이야 대수로울 게 없으며, 포용하지 못할 것도 없다는 괴이쩍은 논리다. 이게 어느덧 한국사회 대세다. 핵으로 무장한 주적(主敵)

북한에 대한 무장해제가 이토록 위험천만할 수 없다. ‘생각의 틀 깨기’ 6차 토론회가 ‘새는 좌우 날개로 날지만, 한 방향으로 간다’고 주제를 설정한 것도 한국의 상황이 걱정스럽기 때문일 것이다.

‘거의 망조 든 나라’라는 진단은 그래서 나온다. 그뿐인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중도’, ‘통합’, ‘협치’와 같은 어설픈 용어도 난무한다. 특히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양날개론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함께 가야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감성적 표현이다. 고약한 양날개론은 ‘사상의 스승’ 리영희가 개발한 논리로, 적지 않은 국민이 암묵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이미 반공이란 용어가 사어(死語)가 됐고, 그런 말을 하면 레드 콤플렉스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사람으로 찍히는 게 오래 전부터의 현실이다.

그런 현실을 파고 든 양날개론의 폐해를 살펴보려면, 리영희의 말년 발언을 점검하면 된다. 그는 남과 북이 반반씩 합치자는 체제수렴 통일론과 함께 북핵 옹호로 치달았다. 때론 기계적 중립론으로 비약한다. 일테면 “북한과 남한이 제도권 삶의 방식이건 가치관이건 합쳐서 반반씩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의 눈에 대한민국은 타락한 체제다. 반면 북한은 “평등과 나눔 그리고 인간적 협동의 철학”을 가졌으니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헛소리다.

리영희만 열간이인가? 우리 대부분이 리영희를 닮아 ‘이념적 백치’가 되어가고 있다. 이번 4.13 총선만 해도 그렇다. 울산 지역에서 구 통진당 소속의 김종훈-윤종호 두 명이 무소속으로 각각 출마해 모두 당선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가? 불과 1년 반 전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결단으로 통진당을 해산할 때의 국민적 합의는 어디로 간 것일까? 통진당 해산 때의 여론과, 이번 총선에서 당선시켜주는 변덕과의 사이를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답이 잘 안 보인다. 통진당 해산 당시 안창호-조용호 두 재판관은 이런 명언 하나를 남겼는데 그걸 잘 음미해볼 시점이 지금이다. “스스로를 방어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평균적인 한국인,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가슴 철렁한 경고인데, 1년 반 전에 박수를 쳤던 그 말이 지금은 ‘디스토피아 대한민국’의 도래를 알리는 음울한 전조(前兆)로 다가온다.

정신을 차리자. 당시 현재는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서 통진당 주도세력과 북한이 현란하게 내세우는 “가면과 참모습” 사이를 분간하지 못하는 “광장의 중우(衆愚), 기회주의 지식인-언론인, 사이버 진보주의자, 인기영합 정치인”들에 대한 뜨끔한 경고의 메시지도 집어넣었다. 그건 리영희 식의 양날개론에 현혹된 우리 모두에 대해 주는 조언이다. 새가 날 때 양 날개도 중요하지만 머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은 채 이 나라의 기회주의 지식인-언론인, 사이버 진보주의자, 인기영합 정치인들이 온통 난리법석이다.

머리란 두 말할 것도 없이 헌법적 가치다. 구체적으로 헌법 제4조가 명문화한 “자유민주적 기본

가치”다.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사회혼란과 갈등이란 이 자유민주적 기본가치를 흔들려는 세력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기에 발생한다. 안타깝다.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는 이런 또 다른 보석 같은 귀절도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구 통진당)은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공산주의자는 법률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 레닌의 말처럼 용어혼란 전술, 속임수 전술 등을 통하여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민주혁명의 과업’으로 바꾸어 말해왔다. 그들이 말하는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용어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들은 ‘우익 대 좌익’의 싸움을 ‘민족-민주-민중 대 반민족-반민주-반민중으로, 평화 대 전쟁, 통일 대 반통일, 화해 대 분열로 포장한다. 나아가 그들은 폭력적 방법의 사용도 불사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파괴를 기도하였다.”

1년 반 전 통진당 해산 판결 때는 리석기와 통진당의 무리가 ‘우익 대 좌익’의 싸움을 ‘민족-민주-민중 대 반민족-반민주-반민중으로, 평화 대 전쟁, 통일 대 반통일, 화해 대 분열로 포장했다. 지금은 이 땅의 신문-방송과 사이버 지식인 등이 한 몸이 돼서 그 짓을 반복한다. ‘우익 대 좌익’의 싸움을 ‘민족-민주-민중 대 반민족-반민주-반민중으로, 평화 대 전쟁, 통일 대 반통일, 화해 대 분열로 포장하길 즐긴다. 거듭 반복하지만, 지금의 한국사회는 ‘거의 망조(亡兆) 든 나라’가 분명하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물어야 한다. 대체 이 미친 구조를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

‘새의 좌우 날개’ 논리의 허구

저 자 | 남정욱 편

발행처 | 자유경제원

발행인 | 현진권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9, 신화빌딩 13층 (우편번호:04165)

이메일 | webmaster@cfe.org

팩 스 | 02) 761 - 5058

© 자유경제원 2016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자유경제원에 있습니다.

 자유경제원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